

공 개



의안번호	제 413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12. 27. (제 23 차)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2. 27.

1. 의결주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35조, 제4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 ●●●● : 문책경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12.) 심의필
- 제17차, 제18차, 제20차, 제2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9.21, 2023.10.12, 2023.11.9, 2023.12.19.) 심의필

<별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임원에 대한 조치

- △△△△ ●●●●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3-44조(위험관리 지침의 정비)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제3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2항

2. 조치사유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및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무역금융펀드는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이하 '플랫폼')이 집합투자자산을 해외운용사 ○○○○○○가 설립한 SPC가 발행한 우선주에 투자하고, ○○○○○○는 동 자금을 자기가 운용하는 ■■■■ ■■■■ ■■■■ ■■■ I,II의 기초자산 중 신용보강보험이 부보된 무역금융채권에 대출참여 계약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의 재간접펀드로서
 - 차주의 재무상태 악화, 유동성위기 등으로 인한 원리금 연체 또는 미상환 가능성 등 차주의 신용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 대출참여계약, 투자설명서 등에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해외 운용사가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사 및 차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거래상대방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 우발상황 발생시 플랫폼의 위기상황 대응권한 및 투자자 보호 수단이 부재하는 등 기존에 주로 운용하던 직접 운용펀드 대비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 플랫폼은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가) 펀드 설정 단계

-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10)상 위험의 인식·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였고, 위험관리규정의 일환인 투자심의위원회 운용규정(§2)상 해외 대출채권(무역금융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재간접펀드에 특화된 위험관리기준이나 기존 위험관리기준 내에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그로 인해 무역금융펀드의 제반 위험을 사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미개최하고 신상품의 마케팅 측면을 주로 검토하는 신상품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펀드 설정·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시행하지 못하였음*

* 설령 회사측 주장대로 위험관리규정(§23조의2)에 단계별 위험 점검 및 체계적인 위험관리방안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신상품위원회 심의제도를 두고 있어 펀드 설정단계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기준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마련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동 위원회에서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의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안정성을 강조할 뿐 자체적으로 재간접펀드의 고유위험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관련 규정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험관리체계가 구축·시행되지 않았음

(나) 펀드 설정 이후 위험관리

- (차주의 신용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3)상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권이나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만 마련해두었을뿐, 동 펀드가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은 마련하지 않음
- 그로 인해 펀드 설정시부터 대출참여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가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 펀드 운용기간 중 〇〇〇〇〇〇가 제공한 월간 대출목록에 보험사명과 보험사 신용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명을 비롯한 차주관련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해외운용사 거래상대방 위험)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3)상 거래 상대방의 정의에 보증인만 포함하고 해외운용사를 미포함하였음

- 그로 인해 '20.4.14. 환매중단 이후 〇〇〇〇〇〇가 매월 제공하는 대출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〇〇〇〇〇〇가 특정차주 대출한도를 위반*하거나, 정상차주(category 1)에게 회수된 자금을 부실차주(category 3)에게 증액 대출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했음에도 플랫폼은 이를 적시에 인식·대응하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20.6월말 〇-〇〇차주의 대출액(\$10.7m)이 SPC 순자산가치의 37%를 차지하여 대출한도인 20%를 17% 초과

(2)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24)상 직접 운용펀드에만 적용 가능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한 상태에서

- 대출참여계약*과 투자설명서**에 우발상황 발생시 해외운용사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〇〇〇〇〇〇에 일임하고 플랫폼의 자체적인 비상계획 및 대응방안을 미마련한 결과

* 〇〇〇〇〇〇는 투자자 동의 없이 대출조건 변경 등 채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 차주의 대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

** 〇〇〇〇〇〇가 펀드 운용상의 투자목적 및 전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단계적 회수절차(Soft Wind-Down)' 권한 부여

- '2x.x.xx. 환매중단 이후 〇〇〇〇〇〇가 회수자금을 투자자에게 환매하지 않고 기존 차주에게 재대출하였고 대출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〇〇〇〇〇〇가 투자자가 아닌 차주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 보험청구, 담보회수시 차주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향후 母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 펀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감수하고 투자 원리금 회수보다 차주의 편의를 도모

- '2x.x.xx. 〇〇〇〇〇〇가 단계적 회수절차 착수를 선언한 이후 SPC 만기 연장 및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미동의시 투자자산을 부실채권으로 저가(투자원금의 20~30% 수준)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자
- 플랫폼은 투자자의 비용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2x.x.x. 〇〇〇〇〇〇 제시 조건을 수락하는 등 비상계획 부재로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위험과 부담을 증대시키는 〇〇〇〇〇〇의 불합리한 운용행위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결과

- ☐ 플랫폼은 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x.x.xx~'2x.xx.xx. 기간 중 총 XX개 펀드, X,XX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함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 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의 2.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 49.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⑥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5. (생략)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 액
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1호	5,000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30